

# 내년 총선도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르나

###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 논의 여야 입장차 커 절충 난항

### 총선까지 불과 8개월... 시간 모자라 '대수술' 물건너간 듯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결국 당으로 공을 넘겼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절충이 어렵게 되자 다시 각 당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재협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선거제도 개편보다 공천 방식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사활을 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지역구도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롯

해 여야 일부에서 한때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 적용)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대수술'이 필요한 만큼 최근에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양장서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서만 연일 목소리를 내면서 야당을 향해 '여야 동시 국민공천제 실시'를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단독으로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취약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 등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나서려는 것조차 소극적이다.

사실상 현행 선거제도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을 하고 그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조정해서 의원정수 정도만 다시 논의하는 입장인 셈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불모지'인 호남에선 실익이 적은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을 야당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계산은 토대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20대 총선에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석패율제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신인에게 불리한 대다정 다당 공천 제도를 범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정개특위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선 현행 선거제로는 총선 과반의석

확보가 어려운 데다, 비교적 높은 득표를 하고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던 영남권에서 다수 의석수 확보가 가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6개월 전인 오는 10월13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와 의원정수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작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때만 선거 때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다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결국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만 간신히 끝내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정수 문제만 일부 손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정치 혁신위發 내분 증폭

### 조경태 "혁신위 폐지"...文에 대표직 내놓으라 촉구

### 주류·비주류 갈등 격화 속 영남 당원 115명 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활동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9일에도 혁신위가 발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를 놓고 하루종일 시끄러웠다.

390명 증원론을 거론했다 비난의 표적이 된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이틀째 '신중 모드'였지만 비주류 조경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혁신위를 정면 겨냥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 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 혁신위 폐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더이상 공천권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문 대표부터 모범을 보

이"며 총선 불출마 선언을 접고 부산에 출마할 것을 촉구했다.

대의원 강모 씨 등 당원 333명은 당 윤리심판원에 "조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혁신위를 문 대표의 친위부대라고 폄하했다"며 징계를 청원했다. 또 다른 당원 10명은 "문 대표가 세월호 동조단식을 해 선거참패의 원인이 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가 조만간 인화성 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최고 위원회 폐지 등 논란거리만 제공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폐지, 의원정수 축소, 혁신위 폐지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더이상 공천권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면 문 대표부터 모범을 보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광주시당 등 광주지역 진보정당 당원들이 29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사 앞에서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확대 등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진보정당 "정당지지율 만큼 의석 배분"

### 정의당·노동당 등 새정치에 비례대표 대폭 확대 촉구

광주지역 진보정당들은 29일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녹색당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

사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정당들은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비례율 2:1'로 하는 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시민단체연대회의가 비례대표 확대 등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치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정치개혁의 당사자인 국회는 아무런 결정조차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이 없다는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지키기에는 사활을 걸면서 정작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한 뒤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 배분 ▲비례대표 확대 ▲선거권 연령 인하 ▲여성공천 30% ▲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의 정치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의당 강은미 광주시당 위원장은 "정치개혁은 결국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기득권을 지키는 정당인지, 아닌지가 이번 정치·선거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지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野, 주요 경제의제 '사회적 대타협기구' 검토

### 여권 노동개혁 드라이브 공무원연금식 해법 '맞팔'

새정치민주연합이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의제를 망라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카드로 내세웠다.

29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고위전략회의 등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야당은 작년 말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회적 대타협기구 안을 제안해 성사시킨 바 있다.

새정치연합의 이 같은 접근법은 노동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의제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 여당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고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정책위 차원의 의제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대타협기구에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차별,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경제민주화 등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법인세 정비 문제까지 다루자는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청년 고용대책으로 ▲청년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새누리 의원들 여름휴가 국내로... 내수 소비 거든다

새누리당이 휴가철 내수 소비 진작에 나선다.

새누리당은 2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휴가를 촉진하는 '착한 휴가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메르스 사태 여파로 2년 연속 침체된 내수소비를 활성화하고, 외국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관광업계를 돕자는 취지이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회 대표최고위원 실 회의장 밖에서 "여름휴가는 우리나라

에서"라는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데 이어 서울 시내 곳곳에도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당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적인 'On동소통' 스마트폰 앱에도 국내 휴가지를 추천·공유하는 별도의 게시판 공간을 마련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무성 대표는 귀국 후 가족과 함께 강원도 등지로 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APT 담보대출

상가·주택 담보대출

감정가대비 70%

회원전문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자산및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 자동차세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 장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 장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료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 제외.
-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